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0/ 06 통권 1539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뱀파이어 재벌, 족벌, 파벌

###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중견기업을 위한 ESG의 핵심내용(상공회의소 내용)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견 분석 및 시사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색연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이면 손금산입  
시기의 임의선택 불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  
도의 손금으로 꼭 반영해야 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 < 개인과 법인의 주택과 일반 부동산구입 차이 비교 >

개념구분		개인주택 보유	개인 · 법인의 상용건물 보유	법인의 주택보유
취득단계 취득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부터 12% (비조정지역 8%)	4%	12% 단일 (사원주택만 1~3%)
보유	재산세	종합합산(0.1%~0.4%)	종합합산(0.2%~0.5%)	종합합산 (0.1%~0.4%)
종합 부동 산세	기본 공제	1세대1주택 11억원 (9월 14일부터), 부부 각자 소유 6억원 × 2인	80억원 초과부터 과세 (토지가액에 과세)	기본공제(6억, 9억) 적용 안됨
	누진 세율	3억까지 0.6%~누진율 3.1% (3주택 1.2%~6%)	종합합산 1%~3% 별도합산 0.5~0.7%	3%(2주택까지) 6%(3주택부터)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 (20~40%) 고령자 세액공제(10~30%) 적용	없음	법인에게는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45%) + 10%(2주택, 20% 3주택)	일반세율(개인 6~45%, 법인 20% 내외)	법인 일반세율 (20% 내외) + 20%(주택) 추가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교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39 호 / 주간 40호

2021. 10. 06.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과 법인의 주택과 일반 부동산 구입 차이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견기업을 위한 ESG의 핵심내용(상공회의소 내용)	2
C E O 에 세 이	뱀파이어 재벌, 족벌, 파벌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개인과의 거래 - 장비 임차 후 소유권 이전시 회계처리 -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문의 - 회사보유의 물건을 직원에게 경매 시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적용 - 세제 적격 연금저축 제도 변화	10 11
직 장 인 Survival	인맥 만들기 노하우 10가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 니다 (서면법인-3409, 2021.01.21)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 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법령법인-5277, 2021.02.02)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일반기업 R&D투자 1년세 40% 증가... 중소기업은 1조3천억 규모	15
마케팅 Tax consulting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이면 손금산입시기의 임의선택 불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꼭 반영해야 함	13
세 무 정 보	-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16
회 계 정 보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35
경 영 정 보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8

# 중견기업을 위한 ESG의 핵심내용 (대한상공회의소 내용 핵심)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ESG 본질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비재무적 성과지표

- ① 환경 (Environment) : 탄소제로화, 환경오염 완화, 자원 ·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화
- ② 사회 (Social) : 고객생존, 사회관계 협력 · 개선, 근로자 안전과 인권보장, 성평등, 정보 보호
- ③ 지배구조 (Governance) : 투명경영, 믿을 이사회, 감사위원회, 윤리준수, 뇌물 · 부패방지

2. ESG의 중요성

1) 투자자 요구 :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높은 ESG경영요구 : 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

① 이사 임명 등 경영진 구성, ② ESG 통합투자전략, ③ 대출 · 투자에서 ESG 평가기준 적용

2) 고객의 요구 : 분업화된 공급망 관리에서 ESG 적극 반영,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ESG 친화적 제품 구입

3) 신용평가반영 : 신용등급 조정(환경오염,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ESG 지속가능 채권 발행 판단(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의지 등), 비재무성과 포함

4) 정부 규제 등 : UN의 PRI(ESG 투자원칙), 유럽의 연기금 ESG 공시강화, 영국 공시강화 의무화, 탄소규제(기온상승 2도 이내 유지), 탄소국경세(탄소배출제품에 관세 부과), 한국(자산 2조 이상의 코스피상장사에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 등, 스튜어드십 평가,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강화)

3. ESG 경영활동

1) 기존의 재무활동 + 지속가능경영 비재무활동

- ① ESG 제품 공급, 비재무성과공시 → 고객구매 증가 자본비용감소 → 기업가치 상승, 지속가능경영
- ② 경영전략 수립 : 기술제품 · 서비스혁신, 조직 · 투자 강화, 매출 · 이익 극대화 + ESG 관점 추가
- ③ 경영성과공시 : 재무제표, 재무지표 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 비재무적 경영활동 보고

## 2) ESG 경영의 추진내용

- ESG 경영전략 : 기업의 비전, 목표, 사명, 전략을 ESG에 맞추어 재설계 : ESG 규제 대응, ESG 영향파악
- 지속가능경영의 보고방법 연구 : ESG 테마 M&A 공시,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안내 등

## 3) ESG 정보공개 기준 등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100대 기업은 80% 이상 작성중 + 외부인증 받고 있음)

- 글로벌 기준 : GRI표준, SASB표준, TCFD권고안, IR개념, ISO26000, WEF 이해관계지표
- ESG, 지속가능경영보고 주요 공통지표
  - ① 조직 : ESG 경영진의 대응역할, 위험 · 기회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 ② 환경 : 온실가스 배출(직접 · 간접 배출량, 배출집약도), 에너지 사용(직 · 간접 사용량, 집약도),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총량, 환경법규 위반과 사고
  - ③ 사회 : 임직원 현황(다양성, 평등, 신규고용 · 이직, 청년채용, 육아휴직), 안전 · 보건(산업재해, 제품안전, 광고 표시), 정보보안(개인보호), 공정경쟁과 시장지배지위남용 여부(내외부, 하도급 등)

## 4. 중견 · 중소기업의 ESG 대응전략

- 상황 : 투자자(ESG 미흡회사 선별), 은행 등 여신(대출심사에 ESG 반영)
- 대기업 공급, 납품 등 Supply chain : 협력사의 ESG 동참 요구, 안전 · 인권 · 환경보호 요구, 수요자 요구, 자금조달, 투자 등
- 정부 · 대기업과의 ESG 협력 : 대 · 중 · 소기업간 ESG 파트너십(교육, 연계, data 플랫폼 구축, 적극참여, 개선, 선순환)
- 인식 제고와 변화관리 지원(에너지 절약, 물 감소, 재고 최적화, 노동인권 개선), 투자, 신뢰개선, ESG 생태계 활성화 압박받음
- 각 기업의 ESG 핵심요소 파악(일관성 있는 ESG측정 · 보고기준 구축 : 주제선정, 보고, 내용작성, 검증, 대외공개 등)

# 뱀파이어 재벌, 족벌, 파벌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해방과 더불어 서양과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온갖 문물이 쏟아져 들어 왔다. 그 중에 귀신도 함께 들어왔다.

뱀파이어도 그 중 하나다. 생사람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모든 귀신이 그렇듯이 음습하고 으시시하다. 밤의 권력자다. 해가 뜨고 빛이 나면 맥을 못춘다. 그런데 그 뱀파이어는 두 가지 유별난 점이 있다. 첫째는 피를 빨아 먹힌 생사람이 뱀파이어가 되면서 식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늙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 자신이 때때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것도 업보이며 천벌인지 모르겠다.

재벌, 족벌, 학벌, 파벌, 군벌.

벌자(閼字)가 들어가는 것치고 좋은 것은 없다. 뱀파이어와 닮은 점이 여러가지다.

재벌이 특히 그렇다.

물론 재벌의 긍정적인 공이 한 때 있었다. 그러나 작금 재벌은 소위 5+3이란 약속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5+3이란 국민의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그들 대표들과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통해 약속한 8개의 원칙을 가리킨다. 5는 초기에 약속했던 경영의 투명성 제고, 주주와 경영진 책임성 강화, 상호 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과 업종전문화를 말한다.

1년이 지나면서 3이 추가 됐다.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 출자규제, 부와 경영권의 변칙상속차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 개혁의 실천은 아직도 미흡하고 요원하기까지 한 것 같다. 게다가 이미 기아, 한보와 진로그룹 그리고 대우그룹 등처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보면 뱀파이어와 닮았다는 것이다.

첫째, 생사람 피를 빨아먹는다는 게 그렇다. 국민의 돈, 은행돈을 정경유착으로 자기 돈처럼 독점적으로 갖다 쓰는 속성을 보라. 방만경영을 일삼다가 결국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존재하는 국민의 피만 빨아먹는 정도를 넘칠 것 같다. 이제는 태어날

국민의 피까지도 빨아 먹힐 판이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금융기관 부실을 막는데 쏟아 부어졌다. 그것이 물론 정경유착에 따른 금융권 자체의 부패와 무능과 방만경영이 보태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부실채권 때문이다. 한보그룹과 진로그룹 또 대우그룹 등의 처리와 알량한 워크아웃이란 제도로 수십 개의 재벌부실을 안고 신음하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피가 바로 공적자금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가 계획대로 말대로 될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서하는 말이다.

둘째, 뱀파이어에게 물린 생사람 역시 뱀파이어가 되는 것처럼 상호 출자 등으로 계열사를 만들고 거느리며 선단식 경영으로 패거리를 지어 모든 폐악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많은 계열사가 이익을 못 내고 있으면서도 퇴출이 안된다. 이 점도 죽지도 못하는 뱀파이어와 같다.

셋째, 늡지도 죽지도 못한다는 점이 답았다.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자본과 경영이 세습되는 것이 결국 늡지도 죽지도 못하는 뱀파이어가 아닌가. 북한의 권력세습을 흉볼 처지가 아니다. 거기다 요즘 한국의 대표적 재벌의 왕자의 난까지 구경해야하는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재미없다. 가신은 이제 정치권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가신경영이란 교과서에 듣고 보지도 못한 용어가 인구에 회자된다. 재벌, 족벌, 파벌, 삼벌(三閥)의 삼중주를 국민은 정말 감상하기 죽을 지경이다.

FILA 코리아를 보라. 빗없이 충분한 자기 자본으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찰로 지불해 가면서 서로상생(Win-Win)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빛나는 태양아래 또한 투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귀신이 아닌 이런 맑은 천사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 개인과 거래

**Q**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어느쪽인가요?  
개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 환급이 불가능한데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처리 및 불공제 여부 회신 바랍니다.

**A**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발급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며, 다른 일반거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장비 임차 후 소유권 이전시 회계처리

**Q** 1. 계약내용 및 현재 회계처리  
가. 의료장비를 매달 임차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임차기간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본원으로 이전됩니다.  
나. 의료장비 가격은 6,000만원 입니다.  
다. 현재 매달 1,000만원 지급 시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 중 입니다.  
2. 질문  
가.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전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자산 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는 걸까요?  
-> 이미 자산의 가액만큼 비용인식을 전부 했기때문에 부외자산으로 인식한다?  
-> 자산가액인 6천만원으로 자산을 인식한 후 기 처리된 비용은 전부 마이너스 반영하고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 기 인식한 비용은 수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시점에 자산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한다?

**A** 일반적으로 의료장비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일 것인데, 6개월 임대차하면서 전체 의료장비의 가액만큼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이 이상해보이며 이는 임대차가 아닌 양도거래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안(비용처리 취소후 자산인식후 감가상각처리)이 타당해 보입니다.

##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문의

**Q** 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100억원 정도의 설비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설비와 관련된 수선유지부품 4억원(수선유지주기 2~3년), 설비작동을 확인(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도 1억원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에 케이스 별로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일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2.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3.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별도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별도구매시 구매시기를 상이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A** 세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투자에 범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24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 기계장치 이외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설비와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모두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용 유형자산에 설비 이외의 수선유지부품 등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사보유의 물건을 직원에게 경매 시 문의

**Q**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직원들에게 사내경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낮게 경매를 진행하여 장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직원이 취득할 경우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야하는건지?)

**A**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사내경매도 직원과의 거래이고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어 법인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이 기업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에 반영시키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기업회계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구체적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물리적, 경제적 원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세무조정에서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설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중고자산 취득시도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자산인지 또는 사용한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내용연수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기간이 장기화되어 자산의 원가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선택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에 한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며, 이때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는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기준내

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고자산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중고자산에는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이 포함되며,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불문한다.

### 수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선택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 수정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며, 수정내용연수도 내용연수 적용단위인 자산별·업종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단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같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❶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중고자산 취득에 따른 수정내용연수의 적용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 례] 기준내용연수가 20년인 자산을 경과연수 12년에 취득한 경우의 수정내용연수는?

① 기준내용연수 : 20년

② 수정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20-20×50%)인 10년에서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고 적용함. 그러나 수정내용연수의 신고가 없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20년)를 적용함.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적용(+10%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 법인세 세율 및 적용(+10% 지방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3000억원 이하	22%	4억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2000만원



## 세제 적격 연금저축 제도 변화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
판매 기간	1994년 6월~ 2000년 12월	2001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현재
세제 혜택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사업자는 300만원 한도)	
연금 개시 기간	적립 후 10년 경과&55세 이후		



## 연금 수령 한도에 따른 과세

연금 계좌	연금 수령(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 외 수령(연금 수령 한도 초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중 합과세)	기타소득세 16.5% (전액 분리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 제외	



## 인맥 만들기 노하우 10가지

1. 목표로 삼는 사람을 정하고 모방하라.  
롤 모델링(Role Modeling) 이론처럼 먼저 내가 담고 싶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정하여 그 사람을 최대한 닮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벤트나 모임에 적극 참가해라.  
명함은 항상 여분을 챙기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전략을 쓴다.
3. 때로는 댓가 없이 남을 돕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4. 사내 소식통과 친하게 지내라.  
사내 소식통이나 리셉션 담당자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고 부재 중 전화도 받아주는 사람이니 소소한 부탁 및 각종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5. 다양한 대화 주제를 만들어라.  
화제를 이끌어 내는 “화자”로 주목받기 위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6. 많이 아는 것 보다 깊이 알도록 노력하라  
수많은 사람을 폭넓게 알아도 진짜 내 사람이 아니면 명함첩 속의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7.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베푸는 삶을 살라.  
베푸는 삶이란 것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이고 인맥구축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8. 고마운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다.  
고마운 사람은 잊혀지더라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다.
9.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을 인맥으로 구축하면 그의 성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너무 완벽해 보이지 마라.  
지나친 완벽주의자는 거리감을 주어 폭넓은 인맥을 만들기 어렵다.

# 최 신 판 례 예 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인-3409, 2021.01.21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7.6.22.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 대표 회의로서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 의함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이면 손금산입시기의 임의선택 불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꼭 반영해야 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법인-5988, 2021.01.29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질의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 현재까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질의내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법령법인-5277, 2021.02.02

## 질 의

- (질의1)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 주식 중 당초 상속세를 부담하고 출연받은 주식(422,477주)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일부 주식 처분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에 따른 5% 초과분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수를 결정할 때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 주식 중 출연 당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출연받은 해당 주식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성실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서면법령국조-4589, 2021.02.15

## 질 의

-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투법인으로 '06.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09~'13 귀속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음

질의

- 여러 과세기간(100%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 포함)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을 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 및 감면을 적용 방법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 46507-211, 1994. 4. 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국일46507-211, 1994.4.19.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일반기업 R&D투자 1년새 40% 증가... 중소기업은 1조3천억 규모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19년보다 2.9% 늘어난 데 비해 일반기업은 38.9%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 성장을 위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정부가 산업경쟁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 19로 백신 기술, 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국간 기술경쟁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위험성이 크고 투자규모나 기간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일반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 올해 정부 세법개정, 대기업의 세금 5년간 4조원 깎아준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 7조1000억원 중 55% 가량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2022~2026년 사이 3조90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까지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대기업 감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

지만,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해당 공제들은 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한 통상적인 연구개발지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2021 세제개편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저감정책 등 미래 산업동력을 위한 R&D 지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중장기간 큰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제액 자체의 규모도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다.

중견·중소 기업도 가능한 영역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 대기업 공제액 규모만 가지고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 작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건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 국세청, 2020. 11

## 1 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여·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 주 자	국 내	과 세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2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분	계 산 방 법
원칙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㉑ × ㉒) - ㉓ ㉑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㉒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㉓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text{지급대상기간} = \text{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div \text{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 3

## 일용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div> <div>'21. 6. 30. 이전 지급분</div> <div>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div> </div> <div> <div>'21. 7. 1. 이후 지급분</div> <div>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div> </div>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 세율(6%)	
( = ) 산출세액	3,000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意識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
-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 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1)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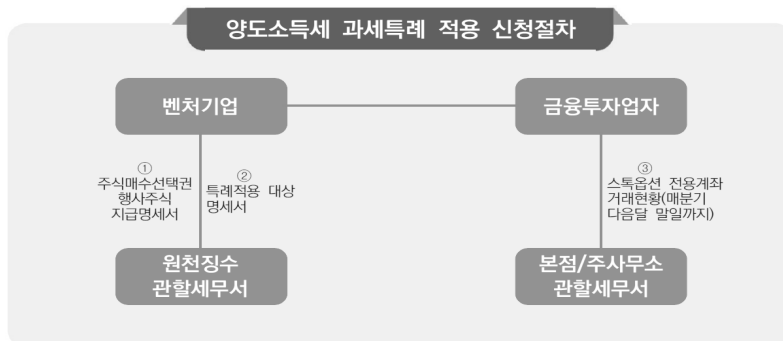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2)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적용기한) 2021. 12. 31.

#### 4)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 12. 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 1. 1. ~ 2000. 12. 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 1. 1. ~ 2006. 12. 31.	행사이익의 연간	3천만원

## 6

### 비과세 근로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대상 근로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li> <li>•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 등에 종사하는 자</li> </ul>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p>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p> <p>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p>

●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월정액급여 계산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②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 월정액급여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li> <li>•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는 상여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li> <li>•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li> <li>•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li> </ul>

##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한 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 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적용방법	<p>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않음</p> <p>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li> <li>•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li> <li>•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li> </ul>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 분	내 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p>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li> <li>•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li> <li>•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li> </ul> <p>※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p>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 당	<p>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li> <li>•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li> </ul>



자녀보육 수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li> </ul>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7

## 외화나 물품으로 받은 근로소득

● 근로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가액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구 분	적용 환율 기준일	적용환율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정기 급여일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www.smbs.biz](http://www.smbs.biz))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확인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형태		근로소득 계산 방법
물품으로 지급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당해 사업자의 판매가액
	그 외	시 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액면가액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지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준용

\* 신주가액이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 51㉔)

## 8 근로소득 수입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 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 는 연도	

## 9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1) 외국인의 연말정산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은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구 분	내 용
대상소득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21. 12. 31. 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
세액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li> <li>*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불구하고 19% 원천징수 가능</li> <li>•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li> <li>• 해당 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li> </ul>
신청절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22조)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연말정산 방법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를 준용하여 계산
-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 배제

10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항 목	구 분		비 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 원천소득 포함	국내 원천 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 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11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대가의 총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1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13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 과세표준</p> <p style="text-align: center;">=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p>
------------------------------------------------------------------------------------------------------------------------------------------------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14

## 농어촌특별세

## 1) 과세대상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016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전환

## 2) 과세표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세액공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20%)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액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

근로자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대상인 주택 융자금의 이자를 연간 1,500,000원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았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450,000원 = 1,500,000원 × 30%

농어촌특별세 90,000원 = 450,000원 × 20%(세율)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1. 9

##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요약 】

- ◆ (분석 결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2.5%)]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
  - \*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4사, 의견거절(범위 제한) 1사
-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준비 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
-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손상평가 등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된 통제미비점(11건)으로 구성
- 외부감사인인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사 중 1사의 감사(위원회)만 내부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
- ◆ (시사점)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 요인으로 지목
- ⇒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
  - \*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 I 개 요

-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 '19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로 전환
    - \*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 운영범위도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2조원('24년), 5천억원 미만('25년)
- (점검대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점검하였으며, '19회계연도 대비 253사\* 증가
  - \*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자산 2조원 이상('19년) →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파악하고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 ①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 3단계로 진행

## II 분석결과

###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2.5%)]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
  - \*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4사, 의견거절(범위 제한) 1사
  -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준비태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

□ (의견현황)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전기(2.5%) 대비 1.3%p 감소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413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413사 중 408사는 적정의견을, 5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받음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 분	FY 2019 (자산 2조원 이상)			FY 2020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	코스닥	합계	유가	코스닥	합계
적정(취약점X)	153	3	156	356	52	408
비적정(취약점O) (비율)	4 (2.5%)	-	4 (2.5%)	4 (1.1%)	1 (1.9%)	5 (1.2%)
합 계	157	3	160	360	53	413

□ (의견추세)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 증가(+253사)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감소(△1.3%p)

- 이는 5천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하여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었고
-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05년)에 비적정의견 비율이 12.6%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15~'19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출처: audit analytics.com)

- 미국은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우리나라는 중·대형(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

\*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7,500만 미만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

-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 감사(위원회)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사로 전기(1사)와 동일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되,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며 평가의견을 형성해야 함에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

- (평가 결과)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1사)와 동일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 〈참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



##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등

- ◆ '20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
    - \* '19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8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중 특정분야 회계처리 관련 사항

비적정의견 사유: 중요한 취약점 및 범위제한

구분			FY 2019	FY 2020
중요한 취약점	재무 제표 작성 프로 세스	특정 분야 회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li> <li>-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li> <li>- 리스 회계처리</li> <li>-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 인식</li> <li>- 금융상품 회계처리 정확성 검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li> <li>- 유형자산 손상</li> <li>-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li> <li>- 원가 인식</li> <li>- 유형자산 인식 등</li> </ul>
		회계 정보 전반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정확성 검토</li> </ul>
	내부통제 환경구축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 운영 수준 및 통제환경 수준 미흡</li> </ul>
	범위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li> </ul>

〈참고〉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적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감사기준서 1100 문단 6(i)]

-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감사기준서 265 문단 6(b)]

-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기구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
- 유의적 미비점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 (유의적 미비점) 참고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높은 수준

\*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9개(감사 건수 기준) 회계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외부감사인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통제미비점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



유의적 미비점 유형

(단위: 건)

유의적 미비점 유형	건 수	비 중
①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42	61.8%
② 정보기술통제(ITGCs) 미비	8	11.8%
③ 회계정책 기준서 등 문서화 미비	4	5.9%
④ 접근제한 및 업무제한 통제 미비	3	4.4%
⑤ 내부감사기능 미비	3	4.4%
⑥ IPE* 관련 통제 미비	2	2.9%
⑦ 기타	6	8.8%
합 계	68	100.0%

\* 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 관련 중요한 취약점 비중(53.3%)이 높음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데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9회계연도 기준)

(단위: 건)

사 유	건 수	비 중
· 결산시 발견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 또는 다수의 회계처리 오류	133	23.9%
· 회계담당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함	118	21.2%
· 전산시스템의 접근, 보안 등 전산과 관련한 통제 미흡	109	19.6%
·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70	12.5%
·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0	9.0%
· 기타	77	13.8%
합 계	557	100.0%

(출처: audit analytics.com)

##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음

- (감사의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
- \*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동 결산오류가 모범기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음

### '20회계연도 재무제표·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 분	재무제표 감사의견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411	408
비적정	2	5
합 계	413	413

## III 시사점

- ①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인 '20회계연도 중·대형상장법인(5천억원 이상)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1.2%\*(413사 중 5사)에 불과
    - \* '19회계연도(2조원 이상)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160사 중 4사)
  - 감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
    - \* '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



➡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

\* 자산 1천억원~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 ②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속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 예정('21.7월 입법예고)
  - \* 자산 2조원 이상('22→'23년), 5천억원~2조원('23→'24년), 5천억원 미만('24→'25년)
-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제도 보완 및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
  - \*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이해관계자(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애로 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

## ③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사 중 1사\*의 감사(위원회)만 내부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
  - \* 해당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동일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 등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함[감사기준서 1100 문단 63]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④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

-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 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변형한 경우,
  - \*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중요한 재무제표 오류를 예방·발견·수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음
-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
  - \*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참조
  -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사업보고서에 첨부)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붙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감사의견 근거\*\* 등으로 구성
    - \* 내부회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술하며,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 \*\*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대한 근거 기술
      - 적정: 감사증거가 적정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
      -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음
      -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 2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① (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예시] 적정의견 발췌

-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② (부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예시] 부적정의견 발췌

의견

-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 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으며 …

- ③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예시] 의견거절 발췌

의견거절

-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 [의견거절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

상기에서 기술된 사항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2021. 9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지침서 마련
-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 '98년부터 '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이하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576명(11.6%) → ('19년) 724명(13.4%) → ('20년) 985명(16.0%)

####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금액 현황〉

(단위 : 명)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초과	계
2018	2,060	1,710	626	494	56	26	4,972
2019	2,102	1,940	646	620	71	33	5,412
2020	2,593	1,854	738	842	102	41	6,170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또 부여 시에는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행사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18년) 17.5% → ('19년) 18.0% → ('20년) 24.1%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대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임직원	교수	의사	기타	계
2018년	4,787	83	26	76	4,972
2019년	5,215	67	28	102	5,412
2020년	5,935	73	12	150	6,170

### 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추진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9월 30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톡옵션 발행 신고, 민원 대응 등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 세제혜택 대폭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현행)〉

- 비과세혜택 : 연 3,000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납부특례 : 연 3,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과세특례 : 연3,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이는 '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 ('18.1.1~'19.12.31) 행사이익 기준 2천만원 → ('20.1.1~'21.12.31)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 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필요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계 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등	화	명	9월 24일 (금)	9월 27일 (월)	9월 28일 (화)	9월 29일 (수)	9월 30일 (목)
미	달	러 (USD)	1181.70	1175.30	1175.90	1182.00	1184.90
일	본	엔 (JPY)	1071.45	1060.79	1059.37	1059.38	1058.18
영	국	파 운 드 (GBP)	1621.71	1606.16	1611.28	1600.43	1591.14
캐	나	다 달 러 (CAD)	933.45	928.91	931.18	932.14	928.57
홍	콩	달 러 (HKD)	151.80	150.95	151.07	151.86	152.19
위	안	화 (CNH)	182.19	181.89	182.07	183.03	183.03
유	로	화 (EUR)	1387.55	1377.45	1375.16	1381.23	1374.31
호	주	달 러 (AUD)	862.58	853.80	856.47	855.95	850.34
싱	가	폴 달 러 (SGD)	876.40	868.12	868.40	870.78	870.1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57	280.60	280.78	282.61	283.15